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시, 중국에게 자체적인 비공식적·독자적 대북제재 검토를 요청 필요

중국의 대북 제재 '우회' 시 지역안보차원에서 한미일 동맹 강화 및 미국 주도의 MD 체제 강화 가능성을 중국 측에 주지

발행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중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유도

- 중국은 UN 주도의 대북제재에는 찬성하겠지만, 원유공급 차단이나 교역 중단과 같은 강력한 제재안에는 반대 입장 견지
-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엔차원의 다자제재 보다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큰 중국의 독자제재를 더 두려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게 자체적인 비공식적·독자적 대북제재 검토를 요청
- 다만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유엔차원의 다자제재 보다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큰 중국의 독자제재를 더 두려워할 수 있음. 따라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시, 중국에게 자체적인 비공식적·독자적 대북제재 검토를 요청 필요
- 〉점경지역 무역 관련 엄격한 통관 절차, 중국내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 엄격 심사, 중국지방정부 차원의 대북 투자 심사 요건 강화, 중국 지방정부의 북한 관광 관련 심사 강화, 북한의 중국 내 투자설명회 및 북중 박람회 개최 요건 강화 등

미중 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공통 인식 조율 및 한미중 3각 협력 논의

- 중국은 4차 북핵실험 이후 결연한 반대 입장 표명했으나,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추세와 사드배치 문제 제기 이후 미중 관계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
-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중국의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의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미중 간 이견을 조율하려는 노력 필요
- 한미중 3각 협력의 범위를 북핵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대북 압박 조치를 마련하되, 북미관계 개선 등과 같은 외교적 조치도 동시 제시 필요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안정적 관리

- 기존에는 양국의 國情(체제, 이데올로기, 문화 등) 차이 및 북한요인 등이 한중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최근에는 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 대외전략 방침, 동북아 질서 및 미중관계 변화, 국가이익 우선순위, 지도자의 위기 인식, 국민 상호 인식, 여론과 인터넷 영향력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향후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영향요인에 대한 차단과 함께 비전통적 안보위협(재해, 재난 등)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
-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중국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선순환 가능성 모색 필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틀 속에서 상호 국가이익 조율

- 중국의 한반도 정책 3원칙(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한중 공동 인식 재확인 및 대응 조치 병행
- 북한 핵실험 관련 한미일 공조가 중국과 갈등 구조로 전환되지 않도록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뢰'관계 유지 필요
-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파기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핵 원자재의 북한 유입 차단에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한중 간 공동 인식 확인 필요
- 중국의 대북 제재 '우회' 시 지역안보차원에서 한미일 동맹 강화 및 미국 주도의 MD 체제 강화 가능성을 중국 측에 주지

CHINA WATCHING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 中國政策研究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중 정책 협력 방안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2016. 05. 30 <제15호>

정책 제언

한중 전략대화 기제 활성화·정례화 및 새로운 전략소통 기제 발굴

- 한중 정상 간 합의한 4대 전략대화 기제 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고위전략대화, 외교장관 간 외교안보대화, 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대화, 정당간 정책대화 등을 활성화·정례화
- 새로운 전략소통 기제 발굴을 통한 창조적 북핵 해법 모색: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등 다양한 소다자 협력 추진,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간 비핵화 공조를 한국이 주도, 국제다자무대(ASEAN, CICA 등)에서 한중 고위급 소통 강화 등
-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 공동대응: 한중 국방장관 간 핫라인 활용 및 국방 분야 고위급 교류 확대 필요, 비전통적 안보위협(재해, 재난 등)에 대한 공동대응

한중 공동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연계 방안 마련 및 이를 통한 북한 견인

- 한중 전략적 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전략적 연계(Strategic Linkage) 방안 마련
- 〉한중 FTA 시범지역(현재 인천-웨이하이)을 향후 서해안권-활발해만 지역으로 확대하고, 한중 '산업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해 지방정부 간 투자협력 강화
-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 발굴: 제조업(해양기술과 철도장비 등), 서비스 산업(의료, 금융 등), 첨단산업(항공기 제조 등) 분야에서 한중 협력 강화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육상·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연계: 중앙아, 동남아, 중국 동북3성지역 등에서 연계 협력 강화
- 다만, 한중 공동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연계를 통해 북한을 견인하는 방안은 향후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한 점검 및 북한의 비핵화 태도 변화 여부 평가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 필요

대중국 '정책' 공공외교 확대 및 강화

- 공공외교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와 실질적 진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영역별·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중국 공공외교를 통해 민간영역의 상호이해·신뢰 강화 필요
- 〉중국의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에 대한 정책공공외교 수행 필요
- 〉중국의 여론주도층(싱크탱크, 언론, 기업 등)과 지방정부 지도자 등에 대한 공공외교 중시
- 〉중국 동부연해(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와 중서부(정저우, 시안, 충칭 등) 및 동북3성(지린, 랴오닝, 헤이룽장)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공외교 필요
- 〉특히 북한과의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중인 동북3성지역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공공외교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에 정부간행물 등 자료 제공 필요
- 한중 공공외교포럼과 같은 채널을 통해 양국 공공외교를 구체화하고 심화하는 한편, '한중일 공공외교포럼'을 한국이 주도 필요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등 다양한 소다자 협력 추진

한중 전략적 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전략적 연계(Strategic Linkage) 방안 마련

영역별·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중국 공공외교를 통해 민간영역의 상호이해·신뢰 강화 필요

문제 제기

1.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 이후 한중관계의 시험대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 이후 한중관계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경험

-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桑田碧海)했고, 이는 곧 교역(1992년 64억달러→2015년 2,759억달러), 인적교류(연인원(人次) 1천만명), 한중 FTA 체결, 상호 전략적 중요성 증대 등으로 표출
- 양국관계의 최대 난제는 여전히 북핵 · 북한문제이며, 북한의 4차례(2006, 2009, 2013, 2016)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중관계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
 - 》북핵 위협 →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 등 → 중국의 전략적 우려 →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
- 하지만 한중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제2270호)이 채택된 점은 긍정적 평가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은 정상간 상호신뢰와 양국 국민간 교류의 확대를 바탕으로 다변화되고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

대북제재 이행과정에서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 증대

- 북한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 고수, 북핵 · 북한문제 해결의 복잡성, 미중 경쟁과 갈등 및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의 부활' 등을 볼 때,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긴밀한 협력은 갈수록 중요
- 특히 한중 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과정(post-resolution phase)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을 인식
 - 》2016년 2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한시, "대북제재의 전면 이행을 위해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3월 14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
 - 》3월말 핵안보정상회의 중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
 - 》4월말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혼란을 반대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
- 한중은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를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제재에 집중하기 위한 공동된 목소리를 중시
 - 》사드 논쟁과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배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등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임으로써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방지를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제재 국면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표출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중 협력이 중요하고,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한미중 3국의 공통 목소리 필요
 - 》사드 문제는 미중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미중 간 전략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 따라서 중장기적 사안인 사드문제로 미중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북한이 추가도발에 대한 전략적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드 논쟁의 확산 차단에 대한 한미중의 공통 인식이 존재

2.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협력 필요성

북한 비핵화는 한중 양국의 미래 비전과 부합

-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꿈'을 이루는 데 유리하다고 인식
- 한국 역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남북관계와 한중관계 및 북중관계의 순환이 중요
- 다만,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은 한중관계의 발전과 양국 공동번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한중 간 분야별 · 영역별 상호의존성 갈수록 심화

- 역사적 · 지리적 · 문화적 연계 심화: 유구한 교류 역사,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등
- 교류협력 : 주체(중앙 · 지방정부, 기업, NGOs 등)와 분야(경제통상, 인문교류, 의료관광 등)의 다원화
- 경제적 상호 의존 : 한중 FTA 타결(2014.1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경제벨트 협력 양해각서 서명(2015.10.31.) 등

한중 양국의 상호 전략적 가치 증대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역설적으로 한중 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
- 중국외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 증대: 미중 전략경쟁, 중일 갈등, 남중국해 분쟁 등
- 한국의 통일 · 대북정책에서 중국의 지지와 협력 필요: 한국 국가전략 및 향후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7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핵 보유 기정사실화'전략에 대한 한중 공동 대응

- 유엔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제2270호)을 통해 북핵 불용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6년 5월 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핵보유국 선언'을 통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표출했고, 이는 곧 한중 양국의 미래 비전 및 외교안보전략에 지속적인 도전을 안겨주고 국가이익의 손실을 초래
-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한국과 미국 및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선택은 대북제재의 전면적이고 충실한 실행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
- 이 과정에서 특히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중 혹은 한미중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
- 다만, 7차 당대회에서 핵보유를 선언한 북한이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악화와 한국내 남남갈등을 노리고 대화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표명할 경우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제재국면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시도 가능하다"는 점을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역설적으로 한중 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표명할 경우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제재국면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시도 가능하다"는 점을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3. 한중 협력을 위한 한국의 정책 방향

중국이 '비핵화'를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

-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해 왔음.
- 북한은 2006년 이후 4차례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제기함.
-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이 잇따른 핵 · 미사일 도발이 결국은 중국의 국가이익을 훼손하고 대한반도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 ·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놓을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북핵문제 해결은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가능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문제 포함 필요

북한의 추가적 도발 방지를 위한 대북제재 국면에 집중 필요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제2270호) 이행과정에서 한중은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를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제재 국면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표출
- 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 필요, 특히 중국이 국제공조 참여시 얻게 되는 '사전적 재보증'을 통해 제재 이행에 대한 동기 부여 필요